

“지방분권시대 전북 대전환 이끌겠다”

혁신당 도당, 신년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19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전북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전북이 지역소멸, 청년유출, 산업공동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지방분권 개편과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분권을 ‘한법 1조’에 담아야 할 시대 정신’으로 규정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지 않으면 전북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북’ 국가균형발전 구상과 관련하여, 전북이 실질적인 권한·재정·규제 특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소외지역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전북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산반기 내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 추진 △권한 이양·재정 보강·규제 특례를 포함한 3중 세트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구했다.

다가오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전북 대전환의 분수령”이라고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장기 독점 구조가 전북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고 비판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전북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개편·상반기 내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 제시

“투명한 공천·중대선거구 확대 등 통해 정치 경쟁 복원”

어지는 정치 구조를 깨지 않으면 전북은 바뀌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국힘제로·부패제로’를 기치로 내걸고, 투명한 공천과 검증된 인재 영입, 중대선거구

확대를 통해 정치 경쟁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여성·소외계층의 정치 참여도 실질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12·3 내란 의혹’과 관련해 전

북도청사 폐쇄 및 일부 지자체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제2기 특검이 가동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완수하고, 전북이 5극 3북 구상 속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며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1만호 기자

민주 도당, 올 지방선거 출마 선출직 공직자 평가 마무리

209명 대상... 성과·도덕성 중심의 엄격한 평가체계 첫 적용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마무리했다.

전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위원장 허경무)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지역 선출직 공직자 209명에 대한 평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선 이후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의 의정 및 행정활동을 대상으로 정당·정성 평가를 병행해 진행했다.

평가 대상은 기초단체장 13명, 광역의원 35명, 기초의원 161명 등 총 209

명이다. 특히 이번 평가는 신설·개신된 평가항목을 처음으로 전면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지방자치단체장 평가에서는 ‘당정협치의 이행 여부’가 신규 항목으로 도입됐으며, 도덕성·윤리 평가는 기존 개인과 가족 중심에서 친인척과 측근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자연재해, 전염병, 산업재해 등에 대한 사전 예방 노력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정책 성과가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재정·경제·삶의 질·자치분권 분야에서는 보다 객관화되고 세분화된

지표를 적용해 성과 중심 평가체계를 강화했다.

광역·기초의원 평가 역시 변화가 컸다. 도덕성·윤리 평가에 친인척 및 측근 책임을 포함했으며, 의회 윤리성 평가는 정량·정성 방식으로 고도화됐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제도·정책 개선 성과가 반영됐고, 시장질서와 대표건의안은 정량 평가 항목으로 새롭게 도입됐다.

특히 당원평가는 기존에 의원 7인 이상인 의회에 한정됐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북 14개 시·군 모든 기초의회로 확대 실시됐다. 중앙당과 시도당 행사 참여, 선거 지원 활동, 교육연수 등 당무 기여도 역시 평가에 반영되면

서 단순 출석 위주의 평가에서 실질적인 입법·감사·지역활동 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했다.

허경무 위원장은 “이번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성과 성과를 도민의 눈높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한 과정”이라며 “강화된 도덕성과 실질적 성과 중심 평가가 전북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법률, 행정, 교육, 환경, 청년, 직능, 언론, 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인 평가 활동을 진행해 왔다. /1만호 기자

“전북의 골든타임, 회피 아닌 대안 필요”

‘도시사 출마’ 정현을 익산시장, 행정통합 공개 토론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정현을 익산 시장이 전북의 미래를 둘러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지금은 회피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공개 토론을 거듭 촉구했다.

정 시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TV토론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전북이 처한 현실과 향후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북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독자 권역의 첫 발을 내디뎠지만, 이름이 바뀌었다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냉혹한 현실까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근 광역권들이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동안 전북만 고립된 섬처럼 남아 있을 수는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북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이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정 시장은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우려를 언급하며, 이를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그는 “행정통합은 특



정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뺏고 빼앗는 싸움이 아니다”라며 “더 큰 예산과 권한을 중앙으로부터 확보해 전북 지역에 고르게 혜택을 나누는 상생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에 두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고향 전북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길은 어느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국무총리의 발표를 언급하며 “전북은 지금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다”며 “전북의 대전환과 생존을 위해 결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도지사 출마 예정자들을 향해 “더 이상 침묵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토론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전북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도민 앞에 분명히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전북의 100년 미래를 위한 치열한 고민과 해법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자”며 입장을 마무리했다. /1만호 기자 · 익산=이재춘기자

“교육, 수도권 집중의 변명 될 수 없다”

민주 안호영 의원 “반도체 분산 논의 필요”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 “결론은 결국 ‘그래서 용인’으로 귀결된다”며 수도권 집중 논리를 정면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최근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전 의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AI·반도체 산업에서 인재 양성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지만, 교육과 매출 비용이라는 서로 다른 논거를 동원해 동일한 결론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은 산업 입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부수물이 아니며, 이미 잘 갖춰진 수도권에 기회를 더 몰아주기 위한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교육과 산업을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 구조를 고착화하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안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력 수급, 용수 확보, 송전선로 갈등 등 핵심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은 채 산업의 속도와 타이밍만 강조하고 있다”며 “정작 그 타이밍



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출 비용을 이유로 한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용인 반도체 사업의 90%는 아직 계획 단계로, 합리적 검토와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미 투자된 비용을 이유로 향후 수십 년간 반복될 국가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전략산업일수록 집중이 아니라 리스크 분산이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에 퍼리시스 패키징 등 주변 기능을 맡기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결론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핵심 생산기지는 수도권에 두고 지방을 보조 역할로 고착시키는 불평등 구조”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번 논쟁의 핵심은 이전 찬반이 아니라, 국가 첨단산업을 어떤 구조로 배치해야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논리”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그래서 용인’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답”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K차형 성장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용인 반도체 입지 문제는 5,200만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책임 있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1만호 기자 · 진안=우태민기자

“가족법인 이해충돌? 악의적 왜곡이자 정치적 음해”

김정기 도의원, “이미 소명된 사안” 법적 대응 나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최근 제기된 ‘가족기업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이자 정치적 음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제기된 내용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미 충분히 소명되고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며 “당시 지역 언론과 군민들에게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 의혹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약 문제가 있었다면 민주당 공천을 받고 도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현재 공직자 평가가 진행 중인 시점에 의혹이 재차 제기된 점을 지적하며,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기 위해 제기한 정치적 네거티브 공세”라고 주장했다.

과거 군의원 시절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한 발언이 특정 업체를 위한 이해충돌 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해명했다.

김 의원은 “2018년 군의원 임기 시작과 동시에 과거 종사했던 CCTV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표직과 경영권을 제3자에게 모두 넘겼다”며 “이해충돌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 군정 질문과 관련해 ‘방치된 마을 방범용 CCTV로 인해 주민 불만이 크다는 이장단과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제기한 공익적 질의였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이 19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질의를 앞서 의회사무과와 법적 검토를 거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논란이 된 업체에 대해 “가족기업이 아닌 독립된 주식회사”라며 “특해나 연관성을 전제로 한 프레임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번 의혹 제기를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당의 신뢰를 훼손하는 해당 행위”라고 규정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포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견 말미에 “정치는 음해가 아니라 민생을 책임지는 일”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앞으로도 오직 군민과 도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1만호 기자

국주영은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전주 대표 여성 IT기업 방문

국주영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은 지역의 대표적인 여성 IT기업인 주식회사 나우리를 방문해 여성 기업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전주의 미래 산업 비전을 공유했다.

지난 15일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국주영은 의원은 19일 전주시 완산구 흥산중안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나우리를 방문했다.

국주영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방

자치 30년 동안 전북에서 여성 지체단 체장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정치가 미주한 견고한 유리천장이었다”며, “전북 최초이자 호남 최초의 여성 광역의회 의장을 역임한 저와 IT 분야에서 여성 CEO로서 독보적인 영역을 뚫고 나온 공룡기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우리의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투선과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둘러본 뒤 국주영은 후보는, 나우리가 전주 지역 인재를 지속적으로 채용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나우리와 같은 여성기업, IT 전문기업이 전주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년들이 지어 가는 이유는 정주 여건과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인 탄소 문화콘텐츠 산업에 시를 결합한 청년 정착 도시를 조성해 일상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전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1만호 기자

‘교육은 다시 현장으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출판기념회 성료

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전주교육대학교 천호성 교수가 신간 ‘교육은 다시 현장으로’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천 교수는 지난 17일 전주대학교 수퍼스타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2,000여 명의 교육 관계자와 시민들과 함께 자신의 교육 철학과 정책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해 안호영·이원택 국회의원 등 주요 인



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간 ‘교육은 다시 현장으로’는 천 교수가 30여 년간 교사와 수업연구 교수로 활동하며 전국 500여 개 학교를 직접 찾아 교사·학생·학부모들과 나누는 대화와 토론 현장의 제안을 집약한 책이다.

천 교수는 이 책에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존과 미래를 위한 열 가지 약속’으로 정리해, 담담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로 제시했다.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도서 소개를 넘어, 책에 담긴 교육철학과 정책 비전을 시민들과 직접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1만호 기자 · 김재훈 기자